

공공도서관 자료보존의 현황과 과제*

The Status Quo and Tasks of the Collection Preservation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서혜란 (Hye-Ran Suh)**

김선애 (Sun-Ae Kim)***

강은영 (Eun-Yeong Kang)****

목차

- | | |
|-------------------------|-------------------------------|
| 1. 서론 | 3.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보존·복원을 위한 과제 |
| 2. 국내 공공도서관의 자료보존·복원 현황 | 4. 결론 |

초록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은 사회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개별도서관의 자료보존을 지원하는 주된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공공도서관의 자료보존현황을 파악하여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을 위한 도서관간 협력방안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보존현황에 관한 기초 데이터 수집을 위해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663개 공공도서관에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208개관이 응답한 설문지를 회수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자료보존·복원을 위한 조직과 인력, 자료보존·복원을 위한 시설과 환경,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자료보존·복원센터의 건립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되었다. 국내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보존을 위한 과제로 첫째, 개별도서관 차원의 지식정보자원의 보존성 및 이용성 향상을 위한 자료보존·복원을 위한 자료관리정책의 구비 둘째, 공공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종합적, 효율적 자료보존·복원 체계 구축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was initiated on the basis that public libraries should serve its role as a supplier of intellectual informations to all users an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hould play a role as chief supporter of collection preservation in individual libraries. Situated in such context,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several aspects of the present conditions of Korea public libraries, including the current technical ability and technicians available for materials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current policies for preservation and provisions for disasters, and opinions on establishment of national library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center. Data was drawn from a survey with 208 public libraries in the country. As a conclusion, this study discusses such as 1) securing collection management policies for material preservations and restorations at the level of individual libraries 2) building tripartite system for efficient and methodical material preservations and restorations including public libraries, regional central libraries an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키워드: 자료보존, 공동보존, 공동보존서고, 공공도서관
Collection Preservation, Material Preservation, Collaborative Repository, Public Libraries,
Cooperative Library Collection Storage

* 본 연구는 2014년 국립중앙도서관 위탁연구과제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전략 수립 및 각급 도서관지원 방안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hrsuh@silla.ac.kr)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imsa@ks.ac.kr)

****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의전담교수(eykang@silla.ac.kr)

논문접수일자: 2015년 4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15년 4월 22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5월 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2): 111-134, 2015.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2.111>)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도서관이 인류를 위한 집단기억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다른 문화기관과의 차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도구는 장서이다. 이에 도서관은 그 사회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후세대 이용자들을 위해 가치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보존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이를 통해 도서관장서는 인류의 문화가 응축된 하나의 집합체가 될 수 있으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도서관자료보존을 위한 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지역대표도서관 업무의 하나로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자료를 보존하는 공동보존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부가하고 있는 것을 그러한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지역대표도서관 중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향후 운영 계획을 수립한 도서관은 극소수에 불과하다.¹⁾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시행령」을 통해 지역대표도서관이 자료보존이라는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반해 공공도서관의 경우, 자료실 포화로 인해 공간부족의 문제를 제기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에서 개별도서관 차원이든 지역대표도서관 차원이든 보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도서관자료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위성을 갖는다면, 이에 더해 국내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등이 개별도서관 차원에서 자료보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혹은 체계적인 자료보존을 위해 지역대표도서관이나 국가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이 가능하다.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자료의 공동보존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도서관의 자료보존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공동보존에 대한 요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도서관자료보존에 필요한 전담부서와 인력의 운영 현황, 관련 정책의 확보 정도, 관련 공간의 확보와 시설구비 정도, 보존 중인 장서량과 서고포화정도, 공동보존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한 파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1) 자료보존·복원 현황을 자료보존·복원을 위한 조직과 인력, 자료보존·복원을 위한 시설과 환경,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자료보존·복원센터의 건립에 대한 의견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여, 2) 효율적인 자료보존·복원을 위한 과제를 개별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국가도서관 차원에서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 현재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7개관을 대상으로 공동보존서고 운영 여부와 운영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구시립중앙도서관이 대구지역 공공도서관의 서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교 일부 공간을 할애하여 공동보존서고를 운영 중이며, 대전한밭도서관이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다만, 대구의 경우 교육청 소속 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단순히 공동보관기능만 한다는 점에서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자료보존·복원 현황에 관한 기초 데이터 수집을 위해 국내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1) 자료보존·복원을 위한 조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담부서 현황, 2) 자료보존·복원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보존·복원 관련 규정의 여부와 재난규정의 여부, 3) 보존서고의 시설과 수장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존서고의 유형, 시설과 환경, 수장장서량, 자료이관기준, 서고공간의 포화정도, 4)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료보존·복원센터의 건립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2014년 현재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수록된 국립공공도서관으로 하였으며, 도서관명에 '분관',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영어도서관', '청소년도서관', '학생문화센터', '교육관', '복합문화센터', '문화회관' 등이 포함된 도서관을 제외하였다. 2014년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30일간 웹(<http://www.ksdcdb.kr/my-survey.do?method=study>)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편, 팩스, 이메일(email)로도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를 배포한 663개 도서관 중 총 208개관이 응답하여 31.4%의 회수율을 보였다.

1.3 선행연구 분석

국내에서 공공도서관 자료의 보존 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대체로 개별 도서관의 공간 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필요성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공동보존서고의 설립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

시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무렵이다. 그 해에 석사학위논문 2편과 일반논문 2편이 발표되었다. 조옥수(2003)와 조용완(2003)은 대학도서관을 위한 보존도서관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홍현진 등(2003)은 '국가과학기술문헌센터' 건립을 위한 최적모형을 제시하였다. 강미희(2003)는 대학도서관과 특수 및 전문도서관과 함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폐기 실태와 공동보존 수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동보존에 대한 요구가 도서관의 규모나 유형에 상관없이 높다는 점을 밝혔다.

그 후 한동안 관련 논의가 뜸하던 공동보존서고 문제가 2006년에 다시 대두되었다. 강현민(2006)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발행한 『공공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2005』를 분석하여 개별 공공도서관이 운영하는 보존서고의 예산·운영·시설 등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그 해결 방안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구축된 '공공도서관 협력망'을 활용하여 16개 지역대표관은 지역별 공동보존도서관이 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보존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계층적 공동보존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그 해 9월 25일에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도서관 자료보존현황 및 공동보존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열린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료집(국립중앙도서관 2006)을 출간했다. 이 세미나에서 윤희윤은 도서관의 자료보존 공간 문제의 해법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국립 공동보존관, 그리고 지역대표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공동보존 모형을 제안했으며, 이귀복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추구하는 공동보존관의 기능과 역할을 발표했다. 이 자료집

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장기발전계획 '국립중앙도서관 2010' 사업의 일환인 '권역별 공동자료보존관 건립' 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정보과가 2006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걸쳐 국내 도서관의 자료보존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가 수록되었다. 공공도서관 32개관, 대학도서관 81개관, 특수도서관 10개관 등 관종별 및 권역별로 선정된 123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15개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한 결과, 소장 공간 부족과 자료보존 정책 부재로 인해 보존 환경이 열악함을 밝히고 공동자료보존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단순히 통계 분석에 머물고 조사 대상 도서관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국가 주도로 조사한 국내 도서관의 자료보존 환경과 공동보존 수요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주도형 공공도서관 자료의 공동보존 체제의 구상은 2007년 「도서관법」 시행을 계기로 지역대표도서관의 공동보존 기능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협력 체제를 구상하는 것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김세훈, 심효정 2008; 배순자 2008). 「도서관법」 제23조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가운데 하나로 지역 내 다른 도서관에서 이관 받은 자료의 보존을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지연, 김유승(2011)은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대전한밭도서관, 부산시민도서관, 인천미추홀도서관, 제주한라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법에 명시된 지역 도서관 자료의 이관과 보존 기능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참여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이 각각 공동보존도서관으로 이관할 자료의 선정 및 소유권과 공동보존도서관의 운영권을 나누어 갖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여전히 존재하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타당성과 건립모형을 제안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담은 연구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2012)는 해외 및 국내 사례 분석과 함께 관계법령, 정책, 도서관계의 인식, 최근 10년간 통계를 활용한 수장 공간 부족 예측 등을 근거로 공공도서관의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또 공동보존서고의 주요 기능, 시도별 건립 우선순위와 입지조건 및 건축규모, 공공도서관의 이관자료 기준과 소유권 문제, 바람직한 관리운영 주체 등 운영모형을 제안하였다.

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건립에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 필요성을 논증하거나 일반적 모형을 제시하는 것에 비해서 노지현, 조용완, 이제환(2013)은 부산시라는 구체적 장소성을 바탕으로 통계를 활용하여 부산시 공공도서관들의 수장공간 부족 정도를 산출하고, 공공도서관 사서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및 요구조사, 표적집단 면접과 전문가 자문의 연구방법을 동원하여 부산시에 가장 적합한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도서관 소장자료의 보존 전략으로는 적절한 보존환경을 유지하는 것과 재난관리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이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 그리 많이 축적되지 않은 편이다. 손혜경(2000)은 부산시 소재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각각 1개관을 대상으로 종이매체의

보존 환경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상완 등(2002)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 환경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과 자료보존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안하였다. 이런 초기 연구는 한참동안 맥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다가 비교적 최근에 조용완, 노지현(2013)이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호주 등에 소재하고 있는 16개 공동보존서고의 보존 환경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도서관의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김포옥(2006)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 대전, 전북지역의 75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필요한 경우 전화면담을 통해서 재난대비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재난대책 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공공도서관의 공간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필요성과 협력체제 모형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연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도하는 계층적 모형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지역대표도서관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지역별 분산 모형의 제안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의 전제가 되는 국내 공공도서관들의 자료보존 실태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 데이터는 부족한 편이다. 대부분 통계를 활용하여 추계한 자료를 근거로 쓰거나, 간혹 실태조사를 하였더라도 임의로 선택한 일부 도서관의 현황만을 조사함으로써 그 전모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 자료보존을 소장공간의 문제로 좁혀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소장자료의 열화 상태와 보존 환경 및 운영 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2. 국내 공공도서관의 자료보존·복원 현황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복원을 위한 도서관간 협력방안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을 위해 국내 공공도서관의 자료보존·복원현황을 조사하였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항목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항목에 따른 장서량과 설립년도 간의 교차분석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였고 그렇지 않는 것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술하지 않았다.

2.1 일반현황

조사에 응한 도서관의 지역별 분포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 11.1%와 11.5%로 나타나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광주, 제주, 울산이 각 1.4%, 2.4%, 3.4%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지역적 분포는 현재 국립공공도서관 전체의 분포와 유사한 정도를 보이고 있어 분석결과의 일반화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응답도서관의 장서량과 설립년도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도서관 장서량에서는 100만 권 이상인 도서관은 없다는 점과, 설립년도에서는 2000년 이후 설립된 도서관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도서관 장서량과 설립년도에 따라 자료보존·복원의 현황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유의미한 항목에 대해서만 기술하였다.

〈표 1〉 응답도서관의 지역별 분포

(도서관수(비중, %))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서울특별시	23(11.1)	강원도	17(8.2)
부산광역시	14(6.7)	충청북도	11(5.3)
대구광역시	12(5.8)	충청남도	13(6.3)
인천광역시	9(4.3)	경상북도	18(8.7)
광주광역시	3(1.4)	경상남도	16(7.7)
대전광역시	11(5.3)	전라북도	8(3.8)
울산광역시	7(3.4)	전라남도	17(8.2)
세종특별자치시	0(0.0)	제주특별자치도	5(2.4)
경기도	24(11.5)	합계	208(100.0)

〈표 2〉 응답도서관의 장서량과 설립년도

(도서관수(비중, %))

장서량	빈도	설립년도	빈도
10만권 미만	108(51.9)	1960년 이전	8(3.8)
10만권 이상~50만권 미만	92(44.2)	1961~1970년	6(2.9)
50만권 이상~100만권 미만	7(3.4)	1971~1980년	18(8.7)
100만권 이상~150만권 미만	0(0.0)	1981~1990년	50(24.0)
150만권 이상	0(0.0)	1991~2000년	56(26.9)
무응답	1(0.5)	2000년 이후	70(33.7)
합계	208(100.0)	합계	208(100.0)

2.2 자료보존·복원 조직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자료보존·복원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현황이 어떠한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료보존·복원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단 2개관(1.0%)에 불과하였다. '전담부서는 운영하지 않지만 자료보존·복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42개관(20.2%)으로 나타났으며, '자료보존·복원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도서관은 163개관으로 전체의 78.4%를 차지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도서관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표

3) 참조).

자료보존·복원업무는 도서관의 장서량과 직접적인 관련가능성이 있다. 장서량의 증가는 공간활용에 영향을 미쳐 공간부족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존서고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자료보존·복원업무를 위한 조직 운영 여부를 장서량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서량 10만권 미만 도서관의 경우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도서관이 그룹 내에서 86.1%를 차지한 반면, 장서량이 50만권 이상인 도서관의 경우 그 비중이 57.1%로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3〉 자료보존·복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현황

구분	빈도 (도서관수(비중, %))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2(1.0)
전담부서는 운영하지 않지만 자료보존·복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42(20.2)
자료보존·복원 업무를 하지 않는다	163(78.4)
무응답	1(0.5)
합계	208(100.0)

〈표 4〉 자료보존·복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현황-장서량 별

장서량 \ 전담부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부서는 운영하지 않지만 자료보존·복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자료보존·복원 업무를 하지 않는다	합계
10만권 미만	0(0.0)	15(13.9)	93(86.1)	108(100.0)
10만권 이상~50만권 미만	2(2.2)	24(26.4)	65(71.4)	91(100.0)
50만권 이상~100만권 미만	0(0.0)	3(42.9)	4(57.1)	7(100.0)

즉, 장서량이 많은 도서관일수록 전담부서를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전담부서 현황과 설립년도와의 관계에서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었다.

자료보존·복원업무 전담부서를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도서관의 해당업무 인력현황을 조사하였다.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도서관(총 2개관)의 경우, 1개관은 1명의 사서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1개관은 응답하지 않아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전담부서를 운영하지 않는 도서관에서도 1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간혹 2명의 사서가 투입되는 도서관도 있었다. 특이한 점은 3명 이상의 사서가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는 자료실 별로 보존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보존·복원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현황

에 대한 도서관 사서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면, ‘자료보존·복원을 위한 인적자원의 부족’과 ‘자료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으로 집약된다. 다음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공공도서관에서는 자료보존·복원에 투입되는 인력의 부족 문제 뿐 아니라 전문성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 중 자료보존이나 복원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설문조사지)

2.3 자료보존·복원 정책

정책은 도서관의 철학과 업무에 대한 도서관의 입장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취지문이며, 정책결정은 기획 프로세스와 일상적인 규정 및 규칙 사이에서 이루는지는 의사결정이다. 공식적으로

로 명문화된 정책은 효과적인 도서관 업무를 위해 필수하며, 자료보존·복원업무 영역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도서관이 관련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2.3.1 자료보존·복원 관련 규정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도서관 중 4개 도서관(1.9%)만이 자료보존·복원업무에 관련된 독립된 규정이 있었으며, 51개 도서관(24.5%)은 다른 규정이나 정책의 일부로 관련 규정이 존재했으며, 151개 도서관(72.6%)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다음 인용문에서와 같이 이러한 자료보존·복원 정책 부재의 문제는 개별도서관 차원에서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도서관 보존서고 포화상태의 대비 및 정책개발, 성문화된 지침 배부, 지역보존서고 설립 지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지역 수준에서는 논문이나 전문서적에 의존할 뿐 구체적인 운영방침이 없는 실정이다.”(설문조사지)

자료보존 업무는 장서량과 비례 관계에 있었

던 점을 고려하여 자료보존·복원 업무에 관한 정책 유무를 장서량과의 관계에서 분석해 보았으나, 장서량과 관련 정책의 유무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설립연도가 오래된 도서관일수록 자료보존·복원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설립연도별 관련 규정 여부를 조사하였다. 결과, 1960년 이전에 설립된 도서관의 경우 관련 규정이 있는 빈도가 다소 높았고, 1960년대 설립된 도서관의 경우 그 빈도가 다소 낮다는 점 외에는 특이점이 없었다.

2.3.2 재난 규정

자연재해나 화재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도서관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고 이를 도서관 직원들이 숙지하고 있다면 재난으로부터 중요한 자원을 지킬 수 있다. 이에 국가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한 재난대비 규정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208개 도서관 중 어떤 형태로든 재난대비 규정이 있다고 한 도서관이 96개관(46.2%)인 반면, 재난대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109개관으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5〉 자료보존·복원에 대한 규정 여부

구분	빈도 (도서관수(비중, %))
독립된 별도의 규정이나 정책이 있다	4(1.9)
다른 규정이나 정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51(24.5)
없다	151(72.6)
무응답	2(1.0)
합계	208(100.0)

〈표 6〉 재난대비에 대한 규정 여부

		(도서관수(비중, %))
구분		빈도
독립된 별도의 규정이나 정책이 있다		27(13.0)
다른 규정이나 정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69(33.2)
없다		109(52.4)
무응답		3(1.4)
합계		208(100.0)

〈표 5〉와 〈표 6〉을 비교해 보면, 국내 공공도서관에서는 자료보존·복원 관련 규정에 비해 재난대비 관련 규정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보존·복원 규정과 동일하게 재난대비 규정을 도서관 장서량과 설립년도 별로 분석한 결과, 재난대비 규정 여부는 장서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년도 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1960년 이전에 설립된 도서관의 경우에서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그 외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었다.

2.4 보존서고 시설과 수장자료

2.4.1 보존서고의 유형

국내 공공도서관이 자료의 보존·복원을 위해 보존서고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208개 도서관 중 보존

서고가 '별도 독립공간으로 존재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127개관(61.1%)으로 조사되었다. 별도 독립공간은 아닐지라도, '일부 공간을 할애하여 보존서고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도 32개관(15.4%)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76.5%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보존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없다고 응답한 도서관도 48개관으로 전체의 23.1%를 차지하였다(〈표 7〉 참조).

도서관은 자료를 수집하여 현세대 이용자를 위해 서비스함과 동시에 후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에 자료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최적화된 공간과 그에 맞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존서고가 없는 도서관이 23%를 상회하고 있다. 보존서고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를 개방형

〈표 7〉 보존서고의 유형

		(도서관수(비중, %))
구분		빈도
별도 독립공간으로서의 보존서고가 있다		127(61.1)
자료실의 일부를 할애하여 보존서고처럼 활용하고 있다		32(15.4)
보존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없다		48(23.1)
무응답		1(0.5)
합계		208(100.0)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정리해 보면, 다음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대략 단위도서관 차원의 공간부족 문제로 압축된다. 이러한 공간부족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불가피하게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고 있음과 동시에 공동보존에 대한 요구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장공간 부족을 이유로 해마다 수많은 장서들이 폐기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소장가치가 충분한 장서가 폐기되는 경우도 많다. 단위도서관에서 보존서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전문가가 배치된 국가보존·복원센터가 필요하며, 관련 규정의 정비나 교육을 실시하면 좋겠다.”(설문조사지)

“소규모 도서관에서는 소장공간이 부족하여 자료를 폐기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배가 공간이 없다고 책을 더 이상 구입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로 지역별 공동보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설문조사지)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과 장서량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예측한 대로, 별도의 독립된 보존서고를 구비하고 있는 정도와 도서관 소장장서량은 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즉, 소장자

료가 10만권 미만인 도서관의 경우는 독립된 보존공간 구비 비율이 51.0%인 반면, 소장자료가 10만권 이상~50만권 미만인 도서관과 50만권 이상~100만권 미만인 도서관은 구비 비율이 각 72.5%와 85.7%로 나타났다. 소장장서량이 많을수록 보존서고를 구비하는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만, 보존서고의 유형과 도서관의 설립년도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2.4.2 보존서고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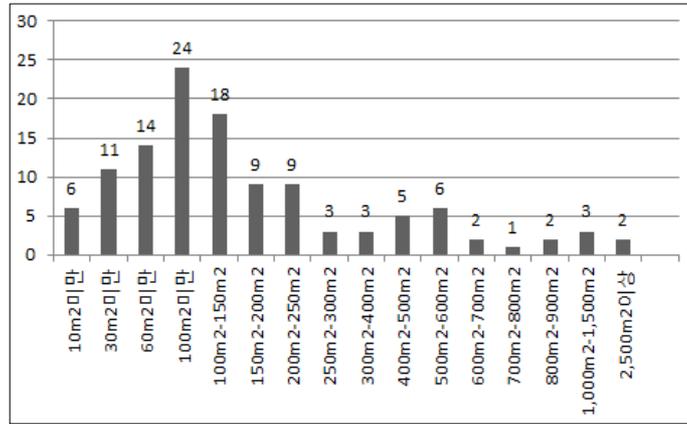
독립된 공간으로 보존서고를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127개관을 대상으로 그 규모를 조사하였으며, 이에 118개 도서관이 응답하였다(〈그림 1〉 참조).

118개 도서관 보존서고의 면적을 범주화한 결과, 면적이 60㎡ 이상~100㎡ 미만인 도서관이 24개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 이상~150㎡ 미만인 도서관 18개관, 30㎡ 이상~60㎡ 미만인 도서관은 14개관, 30㎡ 이상~60㎡ 미만인 도서관 11개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존서고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다소 협소하다고 할 수 있는 100㎡미만인 도서관의 수가 55개관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한 반면, 1,000㎡ 이상인 도서관의 수는 5개관으로 4.2%에 불과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보존공간을 보유하

〈표 8〉 보존서고의 유형-장서수 별

(도서관수(비중, %))

장서수 \ 유형	독립된 공간으로서 보존서고가 있다	자료실의 일부를 할애하여 보존서고로 활용한다	보존기능 수행공간이 없다	합계
10만권 미만	55(50.9)	16(14.8)	37(34.3)	108(100.0)
10만권 이상~50만권 미만	66(72.5)	15(16.5)	10(11.0)	91(100.0)
50만권 이상~100만권 미만	6(85.7)	1(14.3)	0(0.0)	7(100.0)



〈그림 1〉 보존서고의 면적

고 있음에도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자료보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을 뒷받침해준다.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울러 이러한 보존공간의 협소함은 결국 국가적인 차원의 보존공간 확보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었다.

“자료실이 한정되어 있는 것에 반해 매년 들어오는 자료들은 넘쳐난다. 보존실을 따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부족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장가치가 있음에도 버려지는 책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적인 차원의 자료 보존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설문조사지)

2.4.3 보존서고의 시설과 환경

보존서고를 운영하는 도서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의 시설과 환경을 구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보존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159개관(별도 독립 공간으로서 보존서고를 운영하는 도서관 127개

관, 자료실의 일부를 할애하여 보존서고로 활용하는 도서관 32개관)을 대상으로 보존시설과 재난대비 시설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가장 많은 도서관이 구비하고 있는 것은 휴대용소화기(134개관, 83.3%)와 일반서가(119개관, 74.8%)로 나타났다. 수동밀집서가를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80개관(50.3%)인 반면 전동서가를 구비한 도서관은 10개관(6.3%)으로 나타나, 국내 공공도서관 자료보존공간에서 전동서가의 이용정도는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었다.

보존서고의 환경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인 항온항습시설과 온습도계를 갖추고 있는 도서관은 각 53개관과 66개관으로 조사되어, 각 33.3%와 41.5%의 도서관만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존용 중성상자나 탈산처리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도서관은 각 3개관(1.9%)과 1개관(0.6%)으로 조사되어 종이자료의 열화에 대한 대비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9〉 참조).

〈표 9〉 보존서고의 보존시설과 재난시설 현황(도서관수(비중, %))

구분	항목	빈도(전체 159개관)
보존시설	일반서가	119(74.8)
	밀집서가 - 전동서가	10(6.3)
	밀집서가 - 수동서가	80(50.3)
	공기조화설비(항온항습시설)	53(33.3)
	온습도계	66(41.5)
	소화설비 - 자동 소화시설	41(25.8)
	소화설비 - 휴대용 소화기	134(84.3)
	보안장비 - 폐쇄회로 감시장치	22(13.8)
	보안장비 - 이중 잠금장치	31(19.5)
	소독처리장비	10(6.3)
	자외선차단 시설	20(12.6)
	보존용 중성 관리 상자	3(1.9)
	탈산처리장비	1(0.6)
재난시설	화재감시체계 - 화재경보장치	98(61.6)
	화재진압체계 - 자동소화시설	42(26.4)
	전력체계 - 케이블의 방화재 사용	21(13.2)
	전력체계 - 비상작동시설	34(21.4)
	전력체계 - 피뢰체계	31(19.5)

보존서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도서관의 재난대비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도서관이 갖추고 있는 시설은 화재경보장치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시설을 구비한 도서관이 전체의 61.6%에 해당하는 98개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많은 도서관이 자료의 안전을 위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자료보존을 위해서는 화재경보장치에 더해 소화시설 역시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도서관기준이나 도서관법에는 이에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도서관 자료와 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관리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관점에서 기록물관리를 위한 법률과 표준을 근거로 관련 지침을 살펴보았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0조(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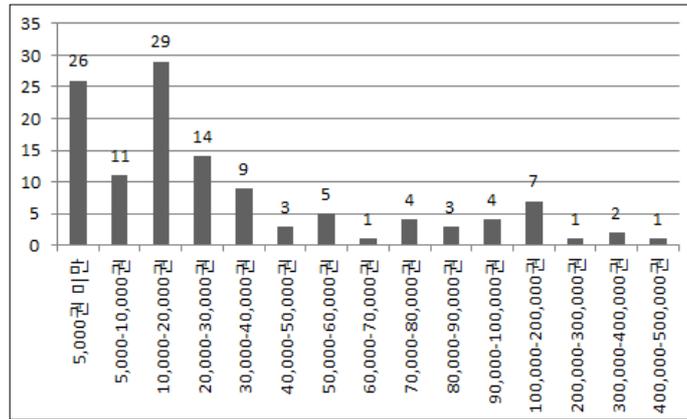
에 따른 별표에 의하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특수기록관 보존서고에는 가스식 자동소화시설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이 제정한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시설·환경 표준」에서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록관에는 가스식 휴대형 소화기를, 특수기록관의 보존서고에는 가스식 자동소화시설을 구비하여 초기화재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11). 이러한 법률과 표준을 참고하면, 도서관 자료보존을 위한 공간에도 초기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시설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자료보존을 위해 자동소화시설을 갖춘 도서관은 전체 도서관의 42개관(26.4%)에 불과해, 화재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도서관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4.4 보존서고의 장서량

국내 공공도서관 보존서고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량의 규모를 조사하였다. 응답도서관 120개관의 보존서고 장서량을 범주화한 결과, 1만권 이상~2만권 미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29개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00권 미만의 장서를 소장한 도서관 26개관, 2만권 이상~3만권 미만의 장서를 소장한 도서관 9개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존서고

소장 장서량 5만권을 기준으로 하여 그 미만인 도서관이 97개관으로 응답도서관의 80.5%를 차지하며 그 이상인 도서관은 23개관으로 19.5%에 불과하다(〈그림 2〉 참조).

보존서고 장서량과 소장 장서량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비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존서고 장서량과 도서관 설립년도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그림 2〉 보존서고의 장서량

〈표 10〉 보존서고의 소장 장서량-장서수 별

(도서관수(비중, %))

보존서고 장서수 \ 소장 장서수	10만권 미만	10만권 이상 ~ 50만권 미만	50만권 이상 ~ 100만권 미만	합계
5,000권 미만	20(76.9)	6(23.1)	0(0.0)	26(100.0)
5,000권 이상~1만권 미만	6(54.5)	3(27.3)	2(18.2)	11(100.0)
1만권 이상~2만권 미만	16(55.2)	12(41.4)	1(3.4)	29(100.0)
2만권 이상~3만권 미만	6(42.9)	8(57.1)	0(0.0)	14(100.0)
3만권 이상~6만권 미만	1(5.9)	16(94.1)	0(0.0)	17(100.0)
6만권 이상~10만권 미만	1(8.3)	11(91.7)	0(0.0)	12(100.0)
10만권 이상~20만권 미만	0(0.0)	7(100.0)	0(0.0)	7(100.0)
20만권 이상~40만권 미만	0(0.0)	0(0.0)	3(100.0)	3(100.0)
40만권 이상	0(0.0)	0(0.0)	1(100.0)	1(100.0)

2.4.5 보존서고로의 자료이관기준

보존서고로 자료를 이관하는 작업은 장서관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새로운 자료가 계속 입수되는 상황에서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훼손이 심한 자료 등을 서가에서 제적하는 것은 장서의 질 관리와 이용자의 자료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이다. 다만, 보존서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열람서가에서 보존서고로 이관되는 자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보존서고로 자료가 이관되는 기준을 살펴보았다. 자료의 출판년도, 자료의 오·훼손 상태, 복본의 유무 등을 자료이관 기준으로 적용하는 도서관이 각 108개관(67.9%), 108개관(67.9%), 109개관(68.6%)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용빈도를 자료이관기준으로 적용하는 도서관도 96개관으로 60.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이관기준이 보존서고 장서량 설립년도 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해당 항목에 따른 별다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11〉 참조).

2.4.6 보존서고공간의 포화정도

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159개관)을 대상으로 현재 보존서고 공간의 포화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이미 공간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63개관(39.6%), 2~3년 이내 공간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도서관은 37개관(23.3%)이었으며, 5년 이내 공간부족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도서관은 29개관(18.2%)이었다. 반면, 10년 이후에도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10개관(6.3%)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도서관이 머지않아 공간부족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표 12〉 참조).

보존서고 장서량에 따른 보존서고 공간의 포화정도를 분석하였다. 장서량이 많은 도서관일수록 이미 포화상태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장서량이 적을수록 10년 이내 포화상태에 이르거나 10년 이후에도 적정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응답한 도서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보존서고 장서량이 적을수록 서고가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 것으로 예측되어, 보존서고 장서량과 보존서고 공간의 포화상태 역시 비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13〉 참조).

도서관 설립년도에 따른 보존서고 공간의 포화정도를 분석하였다.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1년 이후 설립된 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에서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도서관의

〈표 11〉 보존서고로의 자료이관 기준(복수응답)

구분	빈도(전체 159개관) (도서관수(비중, %))
자료의 출판년도	108(67.9)
자료의 오·훼손 상태	108(67.9)
복본의 유무	109(68.6)
이용빈도	96(60.3)
기타	15(9.4)

〈표 12〉 보존서고의 공간 상태

(도서관수(비중, %))

구분	빈도
이미 포화상태	63(39.6)
2~3년 이내에 포화상태	37(23.3)
5년 이내에 포화상태	29(18.2)
10년 이내에 포화상태	16(10.1)
10년 이후에도 적정수준유지	10(6.3)
무응답	4(2.5)
합계	159(100.0)

〈표 13〉 보존서고의 공간 상태-장서수 별

(도서관수(비중, %))

장서	상태	이미	2~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후에도	합계
		포화상태	포화 상태	포화 상태	포화 상태	적정수준유지	
10만권 미만		20(28.6)	18(25.7)	15(21.4)	9(12.9)	8(11.4)	70(100.0)
10만권 이상~50만권 미만		39(50.0)	19(24.4)	14(17.9)	4(5.1)	2(2.6)	78(100.0)
50만권 이상~100만권 미만		4(57.1)	0(0.0)	0(0.0)	3(42.9)	0(0.0)	7(100.0)

〈표 14〉 보존서고의 공간 상태-설립연도 별

(도서관수(비중, %))

년도	상태	이미	2~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후에도	합계
		포화상태	포화상태	포화상태	포화상태	적정수준 유지	
1960년 이전		4(57.1)	0(0.0)	1(14.3)	2(28.6)	0(0.0)	7(100.0)
1961~1970년		2(66.7)	0(0.0)	1(33.3)	0(0.0)	0(0.0)	3(100.0)
1971~1980년		8(50.0)	5(31.3)	2(12.5)	0(0.0)	1(6.3)	16(100.0)
1981~1990년		22(57.9)	3(7.9)	8(21.1)	5(13.2)	0(0.0)	38(100.0)
1991~2000년		19(43.2)	18(40.9)	5(11.4)	2(4.5)	0(0.0)	44(100.0)
2000년 이후		8(17.0)	11(23.4)	12(25.5)	7(14.9)	9(19.1)	47(100.0)

보존서고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면 보존서고는 물론 일반서고의 포화정도 역시 매우 높으며, 이러한 상황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개별도서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결국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었다.

“신설도서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서관이 서고 포화상태에 도달했거나 도달할 것이므로 단일

도서관마다 보존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기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된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설문조사지)

2.5 국가적 차원의 보존·복원센터 설립에 대한 인식

국내 공공도서관의 자료보존·복원을 위한

조직과 인력, 시설과 환경 등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개별도서관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보존·복원을 실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자료보존·복원은 국가의 중요한 유산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료보존·복원센터를 건립하여 개별도서관의 안전한 자료보존·복원을 위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가보존·복원센터의 설립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65개 도서관(79.3%)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별도서관 차원의 자료보존·복원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15〉 참조).

센터 설립 여부에 대한 의견을 소장 장서량과 설립년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소장 장서량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설립년도 별로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설립된 도서관에서 센터 설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른 그룹에 비해 다소 높았다(〈표 16〉 참조).

국가적인 차원의 보존·복원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의견이 수렴된 항목은 ‘자료의 보존·복원 관련 표준과 지침의 작성과 보급’(164개 도서관, 80.3%)이었으며, ‘자료보존·복원 담당 직원 대상 자료보존·복원에 관한 교육 실시’(155개 도서관, 74.5%)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표 17〉 참조).

“도서관 자료실 포화로 서고를 만들어 자료를 보존하고 있지만 서고의 자료는 대부분 방치수준이므로, 앞으로 도서관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줄 센터가 있으면 자료보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설문조사지)

〈표 15〉 국가 차원의 도서관 자료보존·복원을 지원하는 센터 설립 여부
(도서관수(비중, %))

구분	빈도
필요하다	165(79.3)
필요하지 않다	42(20.2)
무응답	1(0.5)
합계	208(100.0)

〈표 16〉 국가 차원의 도서관 자료보존·복원을 지원하는 센터 설립 여부-설립년도 별
(도서관수(비중, %))

년도	여부			합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1960년 이전	8(100.0)	0(0.0)		8(100.0)
1961~1970년	6(100.0)	0(0.0)		6(100.0)
1971~1980년	14(77.8)	4(22.2)		18(100.0)
1981~1990년	42(84.0)	8(16.0)		50(100.0)
1991~2000년	45(80.4)	11(19.6)		56(100.0)
2000년 이후	50(72.5)	19(27.5)		69(100.0)

〈표 17〉 자료보존·복원센터 역할에 대한 의견(복수응답)

(도서관수(비중, %))

구분	빈도
자료보존·복원 관련 표준과 지침의 작성과 보급	164(80.3)
자료보존·복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운영	132(63.5)
자료보존·복원 담당 직원 대상 관련 교육 실시	155(74.5)
자료보존·복원 관련 전문기술지원/자문	121(58.2)
단위 도서관의 보존자료 위탁보관	117(56.3)
훼손 도서의 복원 수리 서비스	98(47.1)

“개별 도서관에서 별도의 인력을 보존·복원 인력으로 양성하기는 불가하므로 국가차원의 지원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설문조사지)

다음으로,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운영(132개관, 63.5%), 기술적인 지원 및 자문(121개관, 58.2%), 자료의 위탁보관(117개관, 56.3%), 훼손 도서의 복원 수리 서비스(98개관, 4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귀중서나 절판도서 등 중요한 국가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 국가차원의 자료보존·복원센터가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개별도서관이 수행하기에는 전술한 인력이나 공간의 문제에 더불어 예산부족의 문제가 걸림돌이 됨을 지적하는 사서들도 많았다.

“귀중본 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보존과 처리가 필요하나 단위도서관에서 처리하기엔 예산이나 장비에 비해 그 수요가 미비하므로, 전국의 도서관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소장 자료보존 복원 지원센터가 필요하다.”(설문조사지)

“개별도서관에서 보존·복원을 전담할 인력 및 공간이 부족하고 이를 위한 예산지원이 용이하

지 않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의 자료보존복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설문조사지)

“현재 공간부족과 훼손 등의 이유로 가치있고 소중한 자료가 (개별)도서관에서 폐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자료보존·복원이 가능하다면 후세에게도 가치있는 소중한 자료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자료보존·복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설문조사지)

“공공도서관에도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가 많은데 현재 보존서고는 보존이 아니라 보관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고, 소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인식부족과 보관장소 부족으로, 외형상 낡았다는 이유 등으로 폐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자료보존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소중한 자료가 소실되는 것이 안타깝다.”(설문조사지)

이상에서와 같이 개별도서관이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에는 보존공간이나 관련 예산과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더해 국가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료보존·복원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보존·복원을 위한 과제

공공도서관 자료보존·복원의 최종 목적은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국가지식정보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전승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은 1) 개별도서관 차원의 지식정보자원의 보존성 및 이용성 향상을 위한 자료보존·복원을 위한 자료관리정책에 관한 지침 마련, 2) 공공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종합적, 효율적 자료보존·복원 체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

3.1 지식정보자원의 보존성 및 이용성 향상을 위한 자료관리정책 구비

국내 공공도서관의 자료보존·복원 현황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공도서관이 78.4%를 차지한다. 자료보존·복원 업무의 부재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예산 및 전문가의 부족과 낮은 우선순위이다. 이를 대변하듯,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자료보존·복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지식정보자원의 보존성 및 이용성 향상을 위해 공공도서관이 자료보존·복원 업무 중 가장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과제는 자료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립이다. 자료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 지침 혹은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자료보존·복원을 위한 예산, 인력, 조직을 논한다

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개별도서관은 자료관리를 위한 기본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모든 도서관이 수집한 자료를 모두 보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또한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료의 보존·복원에 대한 책임과 합의가 필요하다. 자료관리를 위한 정책 혹은 지침서 작성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자료관리를 위한 정책 혹은 지침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목적
- 담당부서 및 담당인력
- 업무내용(보존정책, 재난관리, 장서점검 및 평가, 서고 환경관리 등)
- 자료보존·복원 업무의 범위 및 기준
- 자료보존·복원 처리를 위한 자료 평가 및 기준
- 자료보존·복원 방법(매체별, 유형별, 중요도별 등)
- 재해 통제 및 규정
- 갱신주기 및 기타 특이사항
- 참고(관련법규 및 기준) 및 부록

자료관리정책서의 구성원칙은 위에 제시한 내용을 포함하되, 개별 공공도서관의 자료관리 흐름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별도서관이 견지하는 자료의 수집, 관리, 평가, 제적 및 폐기, 보존·복원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자료관리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료관리정책서는 장서관리정책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서관리정책서가 협의의 자료선정기준, 선택도구, 예산배정, 입수 방법 등의 자료선택과 관련된 내용을 주

로 다룬다면, 자료관리정책서는 광의의 자료선택을 포함한 도서관에 입수되는 모든 자료의 관리를 포함한다. 자료의 과학적 보존은 자료의 용도나 매체에 관계없이 자료가 도서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예방적 차원의 과학적인 서고관리를 통한 자료의 보존성 확보에서부터 훼손자료의 사후적 관리차원의 보전처리, 매체변환 등의 업무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3.2 공공도서관의 종합적·효율적인 보존·복원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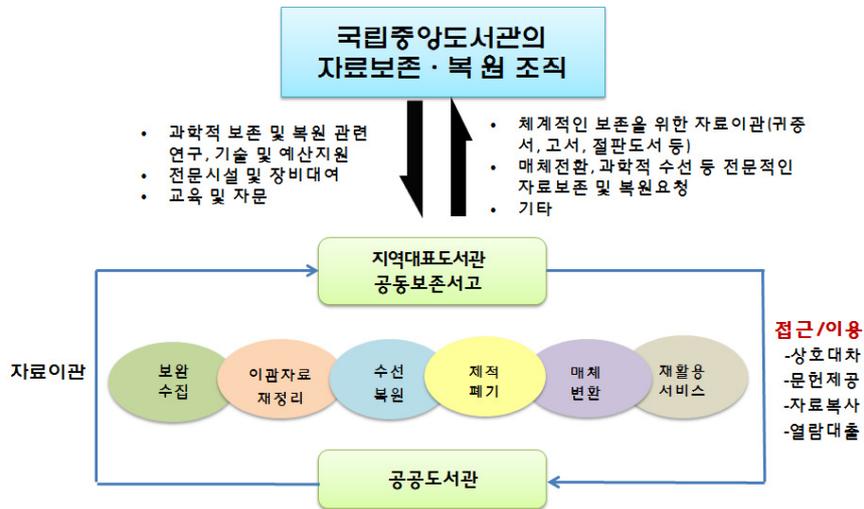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자료보존정책은 개별도서관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자료관리정책을 마련하고 전담부서와 인력을 확보하여 자료보존·복원 업무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더라도 쉽게 가능한 일이 아니다.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 중에는 희귀본, 유일본, 고서 등과 같이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료가 다수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자원의 안전한 관리, 보존 및 후속세대로의 전수의 관점에서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공공도서관 소장자료 자료보존·복원정책은 공공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복원 조직 등이 그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자료보존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의 가장 큰 현안문제는 수장공간 부족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역별 대표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의 설립 및 운영이다. 이미 모든 시

도 공공도서관의 장서 소장공간 부족현상이 시작되어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 설립 및 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연도별 수장공간 부족율은 2016년-64.5%, 2018년-80.9% 그리고 2020년에는-118.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할 경우, 개별도서관의 효율적 공간운영 및 수장공간 추가확보를 위한 비용절감 외에도 장서의 수평적 확장 및 활용범위 확대, 이용서비스 개선, 보존력 증대, 상호협력 촉진, 자료 재활용 극대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

지역대표도서관이 공동보존서고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직면한 수장공간문제 해결 및 자료의 보존력 증대를 도모한다면,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해야 할 가치를 지닌 정보자원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황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공도서관은 수장공간 부족뿐만 아니라 자료보존·복원을 위한 전담조직, 예산, 전문 인력, 시설 등의 부재로 인하여 보존가치를 지닌 자료가 훼손되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개별 공공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한 보존은 어려우므로, 보존·전송되어야 할 중요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제공을 위해 예산, 전문성, 기술력 등을 확보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자료보존·복원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 기대하는 역할은 1) 자료의 보존·복원 관련 표준과 지침의 작성과 보급, 2) 자료보존·복원에 관한 교육, 3)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의 운영, 4) 기술적인 지원



〈그림 3〉 자료보존·복원 조직과 지역별, 권역별 공동보존서고와의 협력체제

및 자문, 5) 자료의 위탁보관, 6) 훼손자료의 복원수리서비스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개별 공공도서관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표준 지침의 작성과 자료보존·복원 업무를 위한 교육으로 조사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도서관에 보존·복원 관련 자문과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공공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체제구축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직면한 수장공간 부족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보존서고환경의 장비 및 시설 대여와 같은 인프라 지원부터 자료보존·복원관련 표준 및 지침의 작성과 보급, 교육 및 세미나 실시, 기술지원과 같은 서비스지원 시스템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자료보존·복원 협력체제 구축은 국가차원의 자원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다(〈그림 3〉 참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자원관리의 중앙기구

로서 개별도서관에 대한 재정, 기술, 인력, 정보 등을 지원하여 국가차원의 중요자원의 효과적 관리 및 훼손자료 보존 대책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체제구축을 강화하여야 한다.

4. 결 론

공공도서관의 수장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보존서고 건립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보존서고는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자료를 공동시설에 보관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개별 공공도서관의 수장공간부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수장공간 부족문제를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을 통해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장공간 부족 문제만 해

결되면 공공도서관의 자료관리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는가하는 질문에 이르게 된다. 수장공간 부족의 문제는 공공도서관 자료관리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자료관리 문제는 수장공간 부족문제 뿐 아니라 국가자원의 안전성과 이용성 향상을 위한 자료보존·복원 정책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자료보존·복원 현황을 파악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도서관의 자료보존·복원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진행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전담조직, 관련 규정, 전문 인력, 시설 등의 부재와 수장공간 부족, 소장자료 증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면, 78.4%에 해당하는 공공도서관이 해당 업무를 위한 조직이 없었으며, 자료보존·복원 업무에 대한 도서관의 명료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지침 혹은 규정을 일부라도 갖고 있는 도서관은 26.4%에 불과하였다. 보존서고의 규모에 있어서도 1관당 평균 보존서고 규모는 235㎡인데 반해, 1관당 보존서고 소장자료 수는 평균 39,219 권으로 조사되었다. 보존서고 규모의 열악함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수장공간 부족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였다.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하였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40%에 달했고, 향후 3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도달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62.9%로 조사되었다.

연구팀은 수장공간의 부족, 보존공간의 협소, 자료보존환경의 낙후, 전문인력 및 기술력 전문 등 공공도서관의 자료보존·복원에 관한 현실을 감안하여, 효율적 자료관리를 위한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단위 공공도서관 차원의 지식정보자원

의 보존성 및 이용성 향상을 위한 자료보존·복원을 위한 자료관리정책서(지침서) 마련을 제안하였다. 정책서(지침서)는 해당 업무의 필요성, 내용, 범위, 절차 등을 담고 있는 업무매뉴얼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의 중요도 파악 및 선후를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뒷받침 할 수 있게 중요하다. 자료관리는 과학적 보존에서 시작되며, 관리는 자료의 용도나 매체에 관계없이 자료가 도서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수행되어야 한다.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과학적인 서고관리를 통한 자료의 보존성 확보에서부터 훼손자료의 사후적 관리차원의 보전처리, 매체변환 등의 업무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관한 명확한 절차와 근거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과제이다.

둘째, 공공도서관의 자료보존·복원정책은 개별도서관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국가자원의 종합적·효율적 보존·복원 체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공공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복원 기구간 협력체제 구축을 제안하였다. 지역대표도서관이 공동보존서고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직면한 수장공간부족 해결 및 자료의 보존력 증대를 도모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개별 공공도서관이나 지역대표도서관의 예산, 인력, 기술력 등으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고 표준적인 지침 작성, 교육 등을 통해 국가자원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인식제고, 전문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3자간 협력체제구축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수장공간 부족문제 해결, 보존서고환경의 장비 및 시설 대여와 같은 인프라 지원부터 자료

보존·복원관련 표준 및 지침의 작성과 보급, 교육 및 세미나 실시, 기술 지원과 같은 전문성 및 연구기술력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 국가자원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자료관리의 문제를 공동보존서고건립을 통한 수장공간 부족문제 해결을 통해 실마리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

가자원의 안전한 관리과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풀어가고자 하였다. 국가자원의 관리는 어떤 한 도서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과 자료관리는 도서관에 자료가 입수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개별도서관을 비롯한 관련기관들이 자료보존·복원 정책을 재고할 시점이다.

참 고 문 헌

- [1] 강미희. 2003. 『국내도서관의 자료보존 및 폐기실태와 공동보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2] 강현민. 2006. 공공도서관협력망을 이용한 공동보존도서관 및 국가보존도서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29-53.
- [3] 국가기록원. 2011. 『기록관리기관표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시설·환경 표준』. 대전: 국가기록원.
-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online] [cited 2015. 5. 9.]
<<http://www.law.go.kr/main.html>>
- [5] 국립중앙도서관. 2006. 국내도서관 자료보존현황 및 공동보존 구축방안: 2006 국립중앙도서관 열린 정책세미나 자료집.
- [6] 김세훈, 심효정. 2008.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319-337.
- [7] 김포옥. 2006. 한국 공공도서관의 재난대비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4): 85-110.
- [8] 노지현, 조용완, 이제환. 2013. 지역 거점형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방안: 부산시를 사례로 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2): 167-195.
- [9]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 『제2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2014-2018』.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10]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online] [cited 2014. 8. 1.]
<<http://www.libsta.go.kr/index.do>>
- [11] 문화체육관광부. 2012.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 건립타당성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12] 배순자. 2008.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과 지역공공도서관과의 협력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

- 보학회지』, 42(3): 45-59.
- [13] 손혜경. 2000. 종이기록물 보존환경의 현단계와 개선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3): 213-241.
- [14] 신지연, 김유승. 2011.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129-150.
- [15] 조옥수. 2003.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참조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대구 경북지역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16] 조용완. 2003. 보존도서관 공동설립을 위한 연구. 『국립대학도서관보』, 21: 130-145.
- [17] 조용완, 노지현. 2013. 공동보존서고의 보존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367-397.
- [18] 홍현진 등. 2003. 국가과학기술문헌센터 건립 최적화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2): 285-318.
- [19] 한상완 등. 2002.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 환경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 67-95.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ng, Mi hee. 2003. *A Study on the Environment of Library Materials Preservation, Weeding Practices, and the Demands of Cooperative Storage in the Korean Library*. M.A.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 [2] Kang, Hyen-Min. 2006.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Repository Library and Repository Library by Using of Public Library Cooperative Network."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1): 29-53.
- [3]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1. *National Archives Standard: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Standard for Records Center and Special Records Center*.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 [4]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Public Records Management*. [online] [cited 2015. 5. 9.] <<http://www.law.go.kr/main.html>>
- [5] Korean National Library. 2006. *The Present State of Collection Preservation of Korean Libraries and Strategies for their Cooperative Preservation: a Booklet of 2006 Korean National Library Open Strategy Seminar*.
- [6] Kim, Se-Hun and Sim, Hyo-Jung. 2008.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Regional Central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1): 319-337.
- [7] Kim, Po-Ok. 2006.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Countermeasure Plan for the

- Disaster Protection in Public Library of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4): 85-110.
- [8] Rho, Jee-Hyun, Cho, Yong-Wan and Lee, Jae-Whoan. 2013. “Developing Strategies for a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y at a Regional Level: the Case of Busa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2): 167-195.
- [9]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14. *The Second Library Master Plan: 2014-2018*. Seou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10]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online] [cited 2014. 8. 1.] <<http://www.libsta.go.kr/index.do>>
- [1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Constructing the Regional Collaborative Repositories*.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12] Bae, Soon-Ja. 2008. “A Study on the Function of Regional Central Library and Collaborative Role for Community Public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3): 45-59.
- [13] Shon, Hae-Kyung. 2000. “Investigation and Improvement of the Preservation Environment for Papper Record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1(3): 213-241.
- [14] Shin, Ji-Yeon and Kim, You-Seung. 2011.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lan for the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ies Based on Regional Centra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129-150.
- [15] Cho, Ok Soo. 2003. *Researches on establishing a Reference Model for a Cooperative Regional Library Depositiry: based on the National Universities located in the Daegu and Kyungbuk areas*. M.A. thesis, Keimyung University, Korea.
- [16] Cho, Yong-Wan. 2003.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ve Library Facilities in Kores.” *Bulletin of National College & University Libraries*, 21: 130-145.
- [17] Cho, Yong-Wan and Rho, Jee-Hyun. 2013. “Preservation Environments of Cooperative Library Storage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367-397.
- [18] Hong, Hyun-Jin et al. 2003. “A Study on the Optimal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2): 285-318.
- [19] Han, Sang-Wan et al. 2002. “A Research on the Environment Analysis for the Preservation of the National Library Collec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2(1): 67-95.